

미국 '전자정부 전략 2003'의 내용과 시사점

정보사회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T. 570-4034, shchoi@kisdi.re.kr)

지난 4월 17일 부시행정부내에 공식적으로 전자정부국(Office of Electronic Government)이 출범함으로써 대통령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Mark Alan Forman이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전자정부/IT 책임자로 임명되어 부시행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Forman은 원래 기업 CIO로 책임을 맡게 된 최초의 연방정부 인사로서, 이전에 OMB에서 IT/전자정부 부국장을 지냈으며, 그동안 기술과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전자정부 관련 CIO급 인사의 임명과 함께 미국의 전자정부는 2002년 부시행정부가 내놓은 전략을 수정하여 '전자정부 전략 2003(E-Governmen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전자정부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2001년 부시대통령은 '정부개혁안(President's Management Agenda)'을 발표하여 연방 정부를 보다 성과지향적·효율적·시민중심적인 정부로 만들하고자 하였다. 정부개혁안 중 하나가 바로 전자정부의 확대로서 2002년 2월에 발표된 '전자정부 전략 2002'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2003년과 2004년에 전자정부 지휘자들이 당면한 과제와 그 수행전략의 필요에 따라 '전자정부 전략 2003'을 발표하였다.

전략보고서는 크게 2002년도의 전자정부 성과에 대한 검토와 향후 전략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전자정부 성과에 대하여 24개 범부처 전자정부 계획의 초기사업과 관련 노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전자정부 우수기관 선정, 연방사업아키텍처(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의 개발, 전자정부법(2002)의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태스크포스가 24개의 전자정부 계획을 검토·채택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에 대

한 백악관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수록되었다.

2. 2002년 전자정부 성과의 주요 내용

연방정부는 전자정부를 2가지 접근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행정기관내에 e-business의 원칙을 사용하여 IT 투자를 현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접근법은 대상별(개인, 기업, 기타 정부 및 연방정부 공무원 등) 행정기관을 초월하여 IT 관련 투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2003년 예산에 24개 전자정부 계획을 제안한 후로 이미 22개 계획의 장래성과 성과를 표명하였다. 다음은 범부처 사업과 부처별 진행사업의 성과 중 일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 노력을 통해 FEA(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사업아키텍처는 하나의 조직이 하는 일, 일하는 방식, IT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말한다. FEA는 IT 관리에 대한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첫째, IT 시스템 투자에 대한 결정을 개선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중복적인지에 대하여 한 기관이 결정하게 한다. 둘째,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IT 지원(support)을 계획한다. 셋째, 비즈니스 동력에 따라 IT 투자를 계획한다. 넷째, 중복성을 줄인다. 다섯째, 프로세스와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개선시킨다. 여섯째, 규모의 경제 실현을 지원한다.

관리에산처(OMB)는 총무처(GSA)와 연방CIO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FEA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FEA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둔 프레임워크로서 OMB와 연방기관들에게 IT 분야에서 연방차원의 투자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며 통제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즉 FEA는 기관내 IT 투자 결정을 지배하고 안내하며, 현재와 향후 계획의 공동작업, 통합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IT 투자관점에서 연방정부 간(수평적), 연방-주-지방정부(수직적) 간의 협력과 의사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24개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성과 외에 다른 전자정부관련 성과들이 도출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예를들어 새로운 전자정부 로고를 포함한 www.egov.gov 웹사이트가 재출범하였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계획, 성과에 대하여 최신의 공공정보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관 투자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기금 500만불을 제공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기관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내 IT 보안프로그램을 개선시키기 위해 발전방안과 분야를 파악하는 표준성과측정법을 개발 및 이용하고 있다.

〈표〉 미국 전자정부 계획 성과 사례

		주요 내용
범부처 사업	FirstGov.gov	3번 클릭으로 정부서비스 이용 가능 Yahoo의 가장 유용한 50대 웹사이트에 선정
	Free File	납세자의 60%가 무료로 준비·신고 2003. 4. 9 현재 본 서비스 이용납세자 240만 명
	GovBenefits.gov	400개 이상 정부급부 프로그램에 대한 단일 접속점 제공 2002년 봄 출범이후 400만 이상 접속 USA Today지 핫 사이트에 등록
	Regulations.gov	제안된 규제사항에 대한 검색·읽기·의견달기가 용이 2003년 1월 출범이후 260만 명 사이트 방문 9,000만 불이상 예산 절감 기대
	GoLearn.gov	과정당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 제공 45,000명 이상 등록 사용자 2002년 7월 출범이후 6,000만 이상 사이트 방문
	E-Payroll	정부 급여처리 센터 22곳에서 2곳의 파트너십으로 통합 12억불 절감
	FEA 비즈니스 참조모형	시민에 보다 나은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IT 투자 집중
	전자정부법	2002. 12. 17 서명
부처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향군인부, 에너지성, 교육부는 대통령 스코어카드에서 황색으로, NSF는 녹색으로 상승¹⁾ · 대다수 기관들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고, 시민중심적 전자정부 솔루션에 동참하고 있음 · 에너지성, 재향군인부, 법무부는 변화와 성과를 지향하도록 CIO 역할을 격상시킴 · 재향군인부, 국방부는 중단없는 서비스를 재향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환자의료 기록을 통합 · 교육부의 일반시민과의 거래(transactions) 중 88%는 전자적으로 수행 · 에너지성은 I-MANAGE를 창설하여 異種의 HR(Human Resources), 재정관리, 조달, 시설관리, 예산시스템을 통합함 · 최신 시스템 보안계획을 갖춘 시스템이 40%에서 61%로 증대 · 안전하다고 인증된 시스템이 27%에서 47%로 증가 	

주: 1) 본 제도는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시행정부가 행정부 경영스코어카드(Executive Branch Management Scorecard)를 활용한 것이다. 부처 및 기관이 경영 계획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 추적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서, 적·황·녹색의 교통신호를 본떠 녹색은 성공적, 황색은 전환단계, 적색은 불만족상태를 나타낸다.

한편, 2002년의 제도적 성과로는 전자정부법의 제정이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책임

자가 이끌고 있는 전자정부/정보기술국의 설립을 통하여 관리예산처의 전자정부 리더십역할을 명문규정, 확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법제(E-Rulemaking), 원스탑 지리/공간정보, 전자기록관리(E-Records Management), 전자인증(E-Authentication), 재난관리 등의 계획을 인정하고 FirstGov.gov 포탈을 승인하였다. 정부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IT 활용의 혁신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일반시민, 민간기업, 비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주-지방-인디언 정부간에 대화채널을 후원한다. 그리고 총무처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기금을 설립하여 관리예산처가 승인한 IT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하며, 2007년 회계연도까지 기금제공을 승인하고 있다.

3. 향후 전자정부 전략의 주요 내용

2001년 당시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할 당시와 비교하여 이제는 전자정부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없고, 행태적·정책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요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리더십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관 기관, 협력기관, CIO들, 대통령관리위원회(President Management Council)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 책임자들이 프로젝트 시행에 협력하는 방법을 개선시켜야 한다.

둘째, 파벌주의를 해소한다. 기관중심적 사회를 강화하는 현 정책과 예산 관행을 해결한다.

셋째, 재원이 필요하다.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정을 거친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전자정부 계획 중에 상호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예산처, 주관기관 간에 인터페이스를 개선시키며, 의회와 더 긴밀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2003년과 2004년 전자정부 계획에서도 시민중심적 성과와 정부간/정부내 팀워크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중복되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줄여나감으로써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는 전자정부와 IT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기관 스코어카드의 전자정부 비중에 대한 측정기준을 반복 설정하였다.

기관의 IT 지출은 현대화계획중 가장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요 IT 프로젝트들은 비용/스케줄/성과 목표의 10% 이내로 두어야 한다.

주요 IT 시스템들은 신뢰되고 공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안전하다고 검증되어야 한다.

24개 대통령의 전자정부 계획은 운영상 혜택을 제공한다(예: 비용절감, 반응시간 단축,

재정부담 감소, 시민서비스 개선 등).

범정부적으로 기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협상한다.

범정부적 해결책을 정함으로써 2004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파악한 6개 겹치는 라인의 중복된 IT지출을 줄인다.

이러한 기준들은 2003년과 2004년으로 나뉘어 달성시점이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기관들이 분기별로 전자정부 스코어카드에 녹색을 받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4. 시사점

미국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특징은 IT 투자의 효율성, 성과관리형 목표설정, 지속적인 사업의 연계성 확보라는 세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IT투자의 중복을 피해 균형·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노력이 FEA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범위를 범부처 사업과 부처별 사업으로 나누어 기관별로 스코어카드를 추적·관리하고 목표시점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다방면에서 성과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클린턴행정부 시절 이후 계속 추진되어온 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추진하면서도 전략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계획 추진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국민의 정부에 이어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자정부 추진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자정부와 정부혁신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렇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이 설정되었다면 구체적인 시행방식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미국에서도 전자정부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성공이라는 목표점에 안착하지 않았으나 방법론 상으로 우리나라가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부처별 사업 뿐만 아니라 부처 전반에 걸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IT와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목표설정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목표달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그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다시 피드백함으로써 미흡한 점을 자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측정기준에 따라 전 기관을 평가, 공개함으로써 추진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객관적·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목표설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집단의 노하우를 국내/국외사례로부터 수집해야 한다.

셋째, 자체평가가 중요하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 11대 사업을 정권 중반이후 시작하여 스스로 평가를 내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미국의 전자정부 전략 2003년은 2002년에 실시했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부시행정부 스스로 내린 평가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좀더 발전된 형태로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비전에 견주어 종합적·포괄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자체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계획 수립과 차기 목표설정에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현재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오류를 시정하여 재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정부혁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자료:

- [1] Administrator, Office of E-Gover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Mark Alan Forman, <http://www.whitehouse.gov/government/forman-bio.html>
- [2] Agency Scorecards, http://www.whitehouse.gov/omb/budintegration/scorecards/agency_scorecards.html
- [3] E-Government Strateg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S., 2003. 4
- [4] Executive Branch Management Scorecard, http://www.whitehouse.gov/omb/budintegration/scorecards/exec_branch02.pdf
- [5] New Office Signals Major Step Forward for President's E-Government Initiativ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or Immediate Release, 2003. 4. 17, <http://www.omb.gov>
- [6] 노 대통령 “부처별로 CIO 두라”, 전자신문, 2003. 5. 6